

조문 별 제·개정 이유서

1. 지점설치 규제 완화(안 제7조)

가. 제 · 개정 이유

- 저축은행은 타 업권과 달리 **단일점포(본점) 보유가 원칙**이며, 예외적으로 금융위 **인가***를 받아 영업구역 내 **지점 등**** 설치 가능

* 인가 요건 : ① 자기자본, ② 법규준수, ③ 재무건전성, ④ 증자 요건

** 사무의 **일부**만을 하는 지사관리사무소, 그 밖에 이와 **비슷한 장소**(저축은행법 §7①)

※ [참고] 타 업권의 지점설치 관련 규제

- ① 은행 : 지점설치 규제 없음(국외지점 설치시에만 금융위에 신고)
- ② 여신전문금융회사 : 지점설치 규제 없음
- ③ 신탁 : 조합은 신탁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아 지사무소 설치 가능

- 비대면 거래 확산 등 금융환경 변화로 지점 **없이도 외형**(예금, 대출 등) **확장이 가능**하여 지점설치 규제의 **당초 취지***는 퇴색한 반면,

* 과도한 외형확장에 따른 부실 예방 및 무분별한 점포신설에 따른 과당경쟁 방지

- **고령층*** 등 **고객 접점 확보**를 제약하고, **영업활동과 무관한 사무 공간 확장** 시까지 인가를 요하여 **경영자율성 저해**

* **60대 이상 고객 비중 : 고객 수 기준 33.0%, 예금 잔액 기준 44.8%** ('20.5말)

나. 제·개정 내용

- 영업구역 내 지점 설치는 사전신고, 총리령으로 정하는 출장소
(본점 또는 지점에 종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별도의 영업소,
사무소, 지사, 그 밖의 업무처리장소) 설치는 사후보고로 전환
- 영업구역 내 출장소 설치에 따른 사후보고 의무 위반시 2천만원
이하의 과태료 부과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저축은행의 경영 자율성 제고 및 고객 접점 확보를 통한 지역밀착형
금융 활성화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없음

2. 임원 연대책임 완화(안 제37조의3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저축은행 임원은 고의·중과실이 아닌 경미한 과실이라 하더라도 직무수행 상 저축은행 또는 타인에 손해를 입힌 경우 예금등 관련 채무에 대해 저축은행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짐
 - 상법상 이사의 제삼자에 대한 연대책임(고의 또는 중과실)에 더하여 예금주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타 업권에는 없는 규제
 - 직무상 경미한 과실까지 임원에 연대책임을 지우는 것은 과도한 측면
- * 저축은행 부실화 시 예금채무는 적게는 수백억원에서 많게는 수조원

나. 제·개정 내용

- 고의·중과실인 경우에만 연대책임을 지도록 개선
(현행) 고의·과실 → (개선) 고의·중과실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임원의 업무해태로 인한 부실화를 방지하려는 법 취지를 유지하는 한에서, 과도한 의무부과는 완화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없음